

## 독일의 사회적 대화: 혁신을 위한 파트너

박 명 준

(쾰른대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독일의 정부, 재계, 노동계 및 학계의 대표들은 지난 1월 15일 공동의 논의를 거친 후 소위 <혁신을 위한 발의(Initiative für Innovation)>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작년 초부터 슈뢰더 정부가 천명한 사회경제개혁 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의 일환으로서 노·사·정 및 학계가 다 함께 혁신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루어 전통적인 기술강국으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각계 대표들과의 논의 이후 결과를 발표하면서 슈뢰더 총리는 “우리는 우리가 강해 왔던 영역에서 계속 강하려면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 공작기계산업, 화학산업, 생명공학산업, 그리고 나노산업 등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려 왔다.” 이러한 시도는 전형적인 독일식의 정치적 틀인 노·사·정 삼자모델에 학계를 더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활성화시켜서 전 국가적인 (기술)혁신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점차 독일이 경쟁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산업부문들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 날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공개된 <혁신을 위한 발의>의 합의문은 9가지의 테제로 정리되었다. 한편, 혁신파트너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하순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결정했다.

## ■ <혁신을 위한 파트너> 사회적 대화의 결과: 9가지 테제<sup>1)</sup>

혁신은 미래의 복지와 노동의 기초이다. 혁신적인 생산물과 서비스의 발전 및 미래 시장의 개척은 경제, 학문 및 정치의 새로운 결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의의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하나의 발의체인 <혁신을 위한 파트너 Partner für Innovation>를 탄생시키는 것에 의견을 일치시킨다.

<혁신을 위한 파트너>의 목적은 독일의 혁신시스템(Innovationssystem)을 모든 수준에서 강화하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우리나라(독일)가 경쟁력(Leistungsfähigkeit)에 있어서 새로운 신뢰를 얻어나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발의는 혁신정책의 전체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바, 단지 연구정책과 경제 촉진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여러 정책영역들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파트너들은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의 독일 혁신사무소 gemeinsames Innovationsbüro Deutschland>를 설치한다.

혁신파트너들은 독일이 미래시장의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과 시장개척을 위하여 행동 통일을 이루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자신들의 과제로 삼는다. 연방정부는 경제계가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시장지도력(Marktführerschaft)을 획득하는 것, 특히 지능적인 규범설정 및 혁신지향적인 수요정책

을 지원토록 한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라는 마크는 독일로부터 생산되어 나온 최고의 품질을 나타낸다. 그것은 혁신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전통의 표현이다. 파트너들은 결정적으로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가 “메이드 인 저머니”를 전체 EU를 나타내는 표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대항한다. 파트너들은 “메이드 인 저머니”의 마크가 오히려 새로운 동력으로 보완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지식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표시로 남아있는 쪽으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한다.

독일은 새로운 혁신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혁신의 파트너들은 독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5년 아인슈타인의 해(Einsteinjahr 2005)”가 학문과 연구를 위하여 이해와 열의를 일깨우는 일과, 학문과 사회가 보다 강력하게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있어 상호책임을 지는 일에 활용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행사로서 아인슈타인 전시회(Einstein-Ausstellung)가 광범위한 참여프로그램들과 함께 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에 있다. 아인슈타인 상(賞)의 제정 등과 같은 추가의 활동들을 공동작업을 통하여 소화해 낸다. 또한, 혁신파트너들은 학생과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일찍부터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Interesse)를 고취시키며, 자연과학 및 공학에서의 후속세대 부족이라고 하는 점점 위협적으로 되고 있는 현상을 저지하도록 노력한다.

우리 교육시스템의 질은 우리가 미래에 세계의 어느 자리에 설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독일은 전체적인 교육사슬(Reform der gesamten

1)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Pressemitteilung Nr. 18/04 Gespräch von Bundeskanzler Schröder mit Vertretern von Wirtschaft, Gewerkschaft und Wissenschaft, 200년 1월 16일

Bildungsketten)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위한 파트너>는 이러한 개혁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하나의 특별한 과제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일찍부터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올 해 안에 하나의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인구학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앞에서 우리에게 점점 더 창조적인 잠재력(kreative Potenziale)들을 활용하지 않고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혁신의 파트너들은 공동으로 가족과 직업의 일치(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를 향한 조건을 부모들을 위하여 개선해나간다. 동시에 기존의 피고용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독일연방정부는 유럽의 산업을 고용촉진적인 산업 및 혁신정책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일찍부터 유럽연합의 참의회(Europäischer Rat)에 핵심적인 유럽의 자매국들과 함께 하나의 발의체를 건설하였다. 연방정부는 EU 내에서 공동의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사를 강력하게 대변해 나갈 것이다.

## ■ 한국적 함의를 찾아서

최근 일자리창출 등의 이슈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틀이 재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혁신시스템의 강화를 통하여 자신이 강해 왔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약했던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얻어내는 일은 단지 독일만의 과제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국가주도의 경제정책 수립만으로도 혁신의 동

력을 얻었던 시대를 보냈다. 전 사회적인 통합력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의 모티브를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뒤쫓아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여기에 “혁신을 촉진하는 일은 단지 돈과 수단을 투여하는 문제에만 있지 않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적, 사회적인 틀 조건들(Rahmenbedingungen)을 갖추어내는 일이다”라는 슈뢰더 총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기왕 사회적 대화의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풀 바에야 보다 광범위하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이를 완전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혁신체제 강화의 문제에게서 말이다.